올 8·15행사 남북 별도 개최

6·15대회 위원장단 결정…6·15 기념일 제정도 추진

6·15 남북공동대회 폐막

금강산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8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한 남·북·해외측 공동위원장들은 16일, 올해 8·15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지 않고 각자 별도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백낙청 남측 위원장과 안경호 북측 위원장, 곽동의·문동환 해외측 공동위원장은 이날 폐막식에 앞서 1시간 40분 가량 금강산호텔에서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 같은 입장을 정했다.

남·북·해외측 위원회는 6·15공동선언 채택 이듬해인 2001년부터 2006년까지 8·15행사를 6·15행사와 연계해 남북한에서 번갈아가며 공동으로 개최해왔으나 지난해에는 북측위가 남측 당국이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대표의 남한 출입을 보장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참을 선언하면서 공동 개최가 무산됐었다.

8·15행사를 각각 개최하기로 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남측 민간단체 관계자는 "몇년 전부터 '8·15광복은 우리 민족끼리에 의해서만 달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동 개최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북측에서 일부 나왔었다"며 "향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기념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뀔 것 같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단 회의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합의한 10.4선언 발표 1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6·15공동선언 실천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 장치를 극복하면서 6·15공동선언 기념일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의 극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공동성명도 발표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시기 등은 전해지지 않았다.

공동위원장단 회의 직후인 오전 11시30분 금강산 현대문화회관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남·북·해외 대표단 430여 명은 6·15 공동선언의 중요성과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종렬 6·15남측위 공동대표는 폐막연설을 통해 "안타깝게도 남북 당국 관계는 여전히 차가운 얼음 속에 있다"며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의 변화는 6·15공동선언 이후 8년 동안 이뤄낸 민족적 결실을 존중하고 이 토대 위에서 민족적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경호 6·15북측위 위원장은 폐막사에서 "이번 대회는 우리 민족끼리 손을 굳게 잡고 하나로 굳게 뭉쳐 공동선언이 열어준 자주통일 대로를 누구도 돌려세울 수 없다는 점을 실천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남측 참가자들은 오후 3시30분경 군사분계선을 넘어 오후 4시 남측 출입사무소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6·15공동선언 8돌기념 민족통일대회 폐막식이 열린 16일, 행사요원들이 폐막과 함께 한반도기를 내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FTA 이행·고유가 대책 4조9천억 추경안 의결

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 FTA 이행 및 국내피해보전 법안 17건과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4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을 심의, 의결한다고 16일 밝혔다.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FTA관련법은 관세법특례법 개정안(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근거 마련), 농어업인 지원법 개정안(FTA 이행지원기금 지원범위 확대) 등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다.

정부 관계자는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FTA관련법을 6월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세계잉여금 4조9천억원의 추경 편성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가환급금 지급 등 고유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지방세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6개 개정안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연합뉴스

물에 잠긴 中 충칭 중국 서남부 도시 충칭이 폭우로 물속에 잠겨있다. 중국 남부와 동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적어도 65명이 죽거나 실종됐으며 10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소개됐다. 폭우는 앞으로 수일간 남부지역에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강의 수위가 불어나 장시, 광시, 광둥 등 여러 성의 마을들을 위협하고 있다. /연합뉴스

中 쓰촨 대지진때 학생 팽개친 교사 자격 취소 당했다

지진을 만나 학생들보다 먼저 달아난 교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당시의 심경을 고백했다가 교사자격을 취소당했다.

중국 신쾌보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지진 당시 두장옌의 한 중학교에서 어문학 수업을 하고 있던 판메이중 선생은 학생들보다 먼저 달아났다는 이유로 교사자격을 취소당했다.

판 선생은 교사라고 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심지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학생들을 구해야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자신의 교사자격을 취소한 상급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 선생은 지난달 12일 건물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대지진을 직감, 건물 밖으로 대피했으나 운동장에 이른 다음 그는 자신이 제일 먼저 운동장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뒤늦게 운동장에 나온 학생들이 "어떻게 혼자 도망칠 수 있느냐"고 원망하자 그는 "혹시 내 딸이라면 희생을 고려할까 모친이라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中 시진핑 부주석 북한 방문

오늘부터 3일간 … 김정일 위원장 등 만나 북핵·식량원조 논의

5년 후 중국의 대권을 이어받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간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

시 부주석은 17일 북한 노동당과 정부의 초청으로 북한 방문길에 올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장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부주석에 선출된 시진핑이 첫 외유국으로 북한을 선택한 것은 북한과 중국의 후계자들이 대권을 잡기 전 상대국을 방문했던 전통에 따른 것이다.

시 부주석은 방북 기간에 김 위원장과 만나 북한이 쓰촨성 대지진 때 보여준 조의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의 사의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 규모와 시기를 논의하는 한편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호협력 증진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은 "시 부주석은 김정일 위원장과 앞으로 5년, 10년 후 양국관계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재 북핵문제 해결이 중요단계에 들어갔다"면서 "시진핑 부주석이 6자회담 재개와 북핵문제 해결안 창출에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이 북핵문제 등 공동 관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해 이번 방문이 북중관계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 부주석은 북한 방문을 마치고 나서 19일부터 25일까지 몽골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예멘 등 4개국을 잇따라 공식 방문한 뒤 귀국한다. /연합뉴스

오바마 美대선 온라인 선거전 판정승

지지자들 자금 모금·사이트 활용 매케인 압도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굳어진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온라인 선거전에서 공화당의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미국의 ABC방송의 인터넷판 기사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는 15일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바마 지지자 가운데 65%가 올해 인터넷으로 정치 뉴스와 정보를 얻었다고 답한데 비해 같은 대답을 한 매케인 지지자의 비율은 56%로 나타나 오바마 진영이 우위를 보였다고 전했다.

또 미국민의 46%가 인터넷을 통해 정치 뉴스를 접하고 올해 대선 캠페인에 관한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러한 수치는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퓨 리서치는 밝혔다.

매케인 의원은 2000년 공화당의 후보지명전에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자금 모금 전략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최초의 대선 후보였지만 올해 대선의 온라인 선거전에서는 오바마 의원이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ABC방송은 전했다.

온라인상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선거자금 모금이나 커뮤니티 사이트를 활용하는 정도, 온라인 비디오의 시청 등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을 능가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의 새로운 기술에 훨씬 더 익숙한 젊은 층에서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퓨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정치에 참여하는 젊은층은 일반적으로 민주당에 쏠리는 편이며 특히 오바마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